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와 경영합리화의 사이에서 - 광주 빗고을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흡*

The Pursuit of Value and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of Consumer's Coopertive Association at Kwangju, Korea

Sung Heup Hong*

요약 : 이 글은 한국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산하의 빗고을아이쿱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가치 추구하고 경영합리화라는 현실적 필요가 경합하면서 때로는 절충해 나가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아이쿱생활협과 빗고을생활협의 역사를 살펴본 위에, 빗고을생활협의 위상과 정체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더불어사건과 매장사업을 둘러싼 지역시민사회단체 간의 알력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빗고을생활협은 창립 준비기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창립 이후에도 생활협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지역사회, 특히 시민사회운동 측으로부터도 일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빗고을생활협은 꾸준히 조합원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생활협의 고유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및 활동영역의 확장은 매장사업의 순조로운 정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매장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 실무조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관료화의 경향이 엿보인다는 점, 전업주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주요어 : (빗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전한 먹거리, 시민사회운동, 경영합리화, 정체성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istory and adaptive strategies of Bitgoul iCOOP Consumer's Coopertive Association(BCCA). BCCA have twofold identity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organization. Going through several ups and downs from the founding up to now date, BCCA has adapted successfully. The numbers of association member have steadily increased and activity areas have extended consistently. Moreover united activity with local civil society have expand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se success results from store business which stated from 2008. But maintaining successful management conditions, the numbers of association member should increase steadily and staff organization have grown in size. At the results, BCAA have been bureaucratized and recruitment of core staffs is difficult more and more.

Key Words : (Bitgoul)iCOOP Consumer's Coopertive Association, Safe Food, Civil Society Organization, Rational Management, Identity

*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Junnam National University, sibung@jnu.ac.kr)

1. 머리글: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하 생협 운동)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압축성장과 개발독재를 배경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펼쳐진 정부 주도의 경제주의적 성장정책은 수출 위주의 산업화와 국토개발을 가져왔지만, 생활환경의 무분별한 파괴와 공해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개발로 인해 농어업을 비롯한 1차 산업부문 종사자들의 상대적 궁핍화가 나타나게 되었다(현기순·이금숙, 2011, 2013; 박주희 2009). 특히 1980년대 이후 전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급속한 확장으로 자본의 힘이 일상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GATT협정¹⁾, 우루과이라운드(1987년), WTO체제(1995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관세철폐협약과 자유무역협정이 순차적으로 맺어지면서 자본지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논리가 더욱더 시장경제체제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지형과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민사회세력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된 것도 1990년을 전후하여 펼쳐진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구도완, 1996). 즉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활환경문제라든지 식품안전문제 등을 생활자들의 결집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생협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부평생협이 1992년 11월에 설립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노동운동의 힘이 약화되면서 부평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이 사회변혁의 새로운 운동 형태로 생협운동을 선택했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8: 11)는 생협 내부의 평가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생협운동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주의적 성장정책이 배태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화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가 생협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사무실을 둔 빚고을아이쿱생협(이하 빚고을생협)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빚고을생협은 먹거리의 안전성과 식량안보의 보루를 자처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영을 펼쳐나가고 있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빚고을생협의 역할과 경영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1차 산업 생산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애초에 시민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도화되고 있는 시장경제 하에서도 비교적 잘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점, 시민활동가들이 핵심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소비자들의 생협 관련 이용양상을 살펴 보기보다는 생협 활동가들의 생협에 대한 인식과 미래 비전을 생협의 조직적 측면과 사업내용, 핵심 정체성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 경영방향과 경영규모의 변화, 그리고 생협 활동가집단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게 만들었던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첫째, 빚고을생협을 대상으로 창립 이전의 준비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주요 사업과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활동가들의 주요 조직과 인원, 주요할

동의 변화 양상, 출자조합원수의 변화 추이 등을 살펴봄으로써 빛고을생협운동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빛고을생협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가치추구와 경영합리화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통해 빛고을생협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시민사회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과 활동영역이 변화해온 양상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6년부터 연구자가 ‘사회적경제’의 사례로 빛고을생협을 조사하면서 수집한 것들(그 연구결과는 홍성흡 외, 2016에 있음)과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것들이다. 특히 2016년 8월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참여관찰하였던 것과 내년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빛고을아이쿱생협 20년사발간위원회’의 발간위원들, 곧 빛고을생협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핵심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이밖에도 이 기간 동안 빛고을생협의 판매매장인 ‘자연드림’ 일곡점과 운암점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소비자로서 참여관찰한 자료도 일부 활용하였다.

2. 한국의 생협운동

우리나라의 소비자협동조합은 1960년대 이전에도 있었다(김중숙, 1996)고 하지만 활동이 거의 미미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한국생협연대, 2002: 36-37). 이는 서구나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비자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신

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분화되었고 1970년대까지는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농협과 신협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김중숙, 전게서).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1987년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김명혜, 1996: 89). 이러한 변화 과정은 서론에서 살펴본 한국사회 전반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흐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은 1969년 천주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원주 일대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된 것(한국생협연대, 전게서: 25)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의 생협운동은 나중에 각 지역에 신용협동조합이 결성되고, 1985년 도농직거래 매장이 원주에 열리고 1986년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 직판장’이 개설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확산되어 나갔다. 이때의 생협운동은 지금의 ‘한살림공동체’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아이쿱생협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살림공동체의 활동가들 중 일부가 아이쿱생협의 창립을 주도하거나 아이쿱생협으로 전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현재도 한살림공동체가 아이쿱생협과 사업연대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1992년 11월 설립된 부평생협으로부터 출발한 아이쿱생협은 출범 6개월 만에 운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농회와 부평생협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1994년 부천생협이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아이쿱생협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고 아이쿱생협의 실질적인 출범은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1997년 7월 수도권의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생협들을 중심으로 ‘생협수도권사업연합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8월 말에는 생협수도권사업연합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도권의 6개 생협이 연합하여 ‘경인지역생협연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일부터 별도의 물류사업을 시작하였다. 1998년 3월에는 '21세기생협연대'의 창립총회를 열어 회원 조합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물류를 연대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라는 원칙하에 구매대행제도(조합비제도)로 이어졌다. 조합비제도를 도입하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회원 생협들이 흑자를 경험하면서 조합비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생협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가 출범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면서 12개의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의 연대 조직인 '한국생협연대'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 물류사업과 생협 관련 정책을 분리하여 전문화하고자 2002년 11월 '한국생협연합회'가 출범하였고, 2006년 2월에는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소비 확산을 기하고자 '자연드림'을 설립하여 그 1호점인 일산후곡점을 개장하였다. 또한 2006년 6월에 생협운동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생협운동에 대한 정책 연구와 각종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생협연구소가 개소하였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8: 11-19). 2000년 9월부터는 인터넷주문방식을, 2001년 5월에는 자동결제서비스(CMS)을 도입하여 생협과 조합원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편리한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 확충되었다. 2002년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농업지킴이'상조회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1999년부터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마을모임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 경비의 일부를 생협연합회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조회와 각종 모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애초 생협이 추구하고자 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시켜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만 10년 동안의 기간은 생협이 지니는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성격과 사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을 어떤 형태로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출구를 만들어나갔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iCOOP생협연대, 2008).

아이쿱생협은 2008년 1월 설립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아이쿱생협은 윤리적 소비입니다'라는 정체성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에는 2007년 7월부터 불붙었던 참치캔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은 생협답지 않다는 일부 조합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2007년 8월에 '아이쿱생협 정체성 연구를 위한 특별연구팀'을 결성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활동하면서 '생협의 소비는 윤리적 소비이어야 한다: 아이쿱생협의 정체성에 대하여'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후 이 정체성 문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조합원과 외부에 아이쿱의 성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전게서: 25-28). 윤리적 소비라는 아이쿱생협의 정체성은 이후 2007년 구성된 공정무역추진위원회의 활동과 2008년부터 시작된 윤리적 소비 논문 공모, 2010년 6·2지방선거 때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2013년의 공정무역실천단 양성과정 신설과 우리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밀국수데이 행사의 실시 등을 통해 꾸준히 실천되었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정체성 선언과 함께 한국생협연대와 한국생협연합회의 명칭을 아이쿱생협연대,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개칭하고 공식 로고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998년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1월 이전에 모든 회원조합들이 법인화를 하면서 연합회와 지역생협 간의 관계를 이전의 상하관계로부터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가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지역조합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연합회가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2013년 2월에 아이쿱협동지원센터가 창립되면서 활동가 조직과는 분리된

사무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전게서: 35-39). 앞에서 아이쿱생협의 초창기에 만년 적자를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조합비제도의 도입이었다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이 2011년 5월부터 실시된 수매선수금제도였다. 수매선수금은 조합원이 필요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하는 돈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아이쿱 생산농가들은 영농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받았고 조합원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필요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갔으며, 아이쿱은 카드 수수료를 절약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매년 먹거리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이쿱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독자인증방안을 확충하기 위해 2007년 11월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1년 8월에는 'iCOOP인증센터'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쿱생협이 여타 생협조직들과 다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괴산과 구례에 조성한 '자연드림파크'이다. 이곳에 2012년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괴산에는 2013년부터, 구례에는 2014년부터 일반 소비자들의 방문이 시작되었다. 이곳은 생협의 조합원과 생산자, 사무직원, 경영진 등이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약 10여년은 아이쿱생협의 조직화와 전문화가 한층 이루어지고 사업 분야와 사회적 실천의 영역이 확장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2018년 12월 말 현재 28만 2,720명(가구)의 조합원, 99개의 회원조합, 229개의 자연드림 매장과 13개의 공동사업법인(쿵스토어)가 있고, 조합원과 회원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쿱생협연합회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2019년 1월 해산)가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세이프넷, 2019: 14-15). 지역조합 99곳의 지역생협이사는 총 824명, 조합원 리더는 3,245명인 상당히 큰 조

직이며 마을모임이 총 898개, 동아리모임이 총 982개에 달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총 8,780명에 이른다. 2016년 이후의 조합원 통계를 보면 출자조합원이 2016년 250,980명에서 2017년 262,507명으로, 2018년 282,720명으로 늘었고, 조합비조합원은 2016년 212,216명, 2017년 228,221명, 2018년 244,473명으로 늘어 출자조합원과 조합비조합원 모두 매년 1~2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말 현재 총 출자금인 536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탄탄한 경영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와 책임 소비를 통해 '생활의 안심과 사람 중심 경제, 더 나은 미래'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 나은 사회, 더 깊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아이쿱생협은 상당히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3. 광주 빚고을아이쿱생협

1) 빚고을생협의 역사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4곳의 지역아이쿱생협이 있는데, 이 중 빚고을생협이 2001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나머지 3곳의 지역생협인 서구 자연생협과 광산구 꿈꾸는생협은 2004년에, 남동구 무진생협은 2011년에 빚고을생협으로부터 분화된 것들이다. 2018년 말 현재 광주광역시의 전체 세대수는 592,818가구인데, 이 중 3.1%에 해당하는 18,592가구가 아이쿱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빚고을아이쿱생협20년사발간위원회, 2019: 20). 이 수치는 다른 지역의 생협이 전체 세대의 2%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통계적으로 광주지역의 인구 1천 명당 협동조합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구양미의 조사결과(구양미, 2015: 115-116)도 위에서 살펴본 생협

의 통계치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빛고을생협은 2001년 9월 창립된 이후 거의 2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고, 2018년 12월 말 현재 광주 북구의 전체세대수 180,682가구의 3.3%에 해당하는 5,820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교적 큰 조직이다. 또한 광주의 4개 생협 중에서 조합원세대의 수와 전체 세대에 대한 조합원세대 비율, 매장수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빛고을아이쿱생협20년사발간위원회, 전게서: 20). 빛고을생협은 2001년에 설립되었지만 1992년부터 도농직거래를 통해 도농공동체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장성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에 시작된 ‘한마음공동체’에서는 1992년에 아파트별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사업을 시작하다가 1994년 9월에 ‘하남한마음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고 매장사업을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취급물품을 다양화하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확대를 위한 설명회와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여 창립 시의 조합원이 180명에서 1996년에는 3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순조로운 경영흐름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1996년 중후반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1996년 5월 정기총회에서 생산자출자금을 부채로 전환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이사장이 사임하고 공동대표제를 실시하는 등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1997년 5월에 시작한 아동도서점 사업이 특별한 반향을 얻지 못한 채 1998년 7월에 폐점하게 된 것과 2000년 1월에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던 구매대행제도가 같은 해 3월에 이르러 채 두 달도 안 되어 유명무실해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생협 내부에서는 지금의 빛고을생협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들²⁾을 중심으로 별도의 생협을 창립해 보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 8월 31일의 ‘하남한마음생협’ 긴급총회에서 ‘가칭 빛고을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하고, 물류방식을 ‘21세기생협연대’로 바꾸며 기존의 ‘하남한마음생

협’의 적자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7월에 창립총회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같은 해 9월 15일에 ‘빛고을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1년 출범 이후 빛고을생협이 손조롭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조합비 조합원과 총조합원수의 비율이다. 빛고을생협의 준비기에 해당하는 2000년에는 조합비조합원이 25명으로 총조합원 180명의 14%에 미치지 못하던 것에서 출범 직후인 2001년에는 약 80%(143명/179명)로 수직상승하였고, 2002년에는 거의 모든 조합원이 조합비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369명/372명). 그리고 이러한 출범 초기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광주시 대인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2004년에 분화될 예정인 서구생협준비위원회를 10월부터 가동하였다. 2004년 2월에는 서구생협이, 같은 해 11월에는 광산구생협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조합원토론회를 통해 빛고을생협의 정체성과 연대 활동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던 와중에 2004년 6월 더불어식품의 우리밀 원부재료 혼입사건(이하 더불어사건)이 발생하면서 빛고을생협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둘러싼 논쟁과 활동가집단 내부의 알력 등을 노출시키면서 조직의 뿌리를 흔들어놓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일련의 내홍을 거치면서 이사회가 새로 만들어졌고, 다음 해에는 빛고을생협이 2년간 생협연대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생협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야기되어 조합원의 수가 격감하였다. 더불어사건은 중앙연합회인 생협연대가 2002년 의성 생산자의 양파 혼입사건, 2003년 원주의 잡곡 혼입사건 등과 함께 당시까지 생산에만 집중하던 인증제도를 유통 및 가공과정에서 혼입을 막을 수 있는 유통인증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사건 이후 2년간,

즉 2006년과 2007년은 빛고을생협의 조직을 재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에는 조합원확대를 위해 마을모임과 동아리모임을 활성화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하는데 진력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한 다양한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빛고을생협은 2007년도부터 준비해온 매장사업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8년에는 빛고을생협의 명칭도 ‘아이쿱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매장사업을 시작하면서 조합원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매장수도 꾸준히 늘어났으며 경영도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확장 추세로 마을모임과 자연드림 모니터링의 주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마을지기의 수도 계속 늘어났다.

매장사업을 통해 더욱 커진 생협은 앞으로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에는 중장기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 슬로건에 걸맞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의 연대, 종군위안부 관련 영화상영,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 공정무역의 날 행사, 공정무역과 관련한 ‘파나이공장’ 건립기금 모금운동, 학용품 보내기 운동, 앞산뒷산박람회 행사, 여성주의 강좌 개설, 지역나눔활동, 영산강지킴이333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마을모임은 전해에 비해 14개에서 19개로, 동아리모임은 4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빛고을생협의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생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다양한 교육, 홍보, 놀이강좌와 행사를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3월에는 식생활교육센터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매곡동 이마트저지 대책위원회 활동, ‘오월 여성과 이야기 나누다’ 행사,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 근로정신대 문제해결 10만 희망릴레이, ‘지구의 날’ 행사, 한새봉두레 활동, 대안교육 설명회와 광주드

림 후원 행사, 지방의제21 회의 참여, 광주생태문화축제, 구제역토론회, GMO강좌, 여성친화 마을만들기 행사, 성미산공동체 강좌, 광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남동구의 무진생협이 광주의 네 번째 아이쿱생협으로 분화되어 나갔고 자연드림 양산점과 문흥점이 개장하여 매장수가 두 곳 늘어났다.

2012년 이후에도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생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한 형태의 행사와 홍보 활동, 교육 관련 활동 및 지역사회 연대활동이 펼쳐졌다. 2012년부터는 빛고을생협이 활동가 중심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문화가 분업화와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권역공동사업법인³⁾을 신설하여 매장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2014년에는 자연드림 일곡점을 확장 이전하여 빛고을센터라는 지역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활동가와 조합원들의 쉼터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인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개장하면서 광주지역의 생협은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시에 일곡지역의 운동조직인 ‘삶을 가꾸는 일곡마을회의’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좀 더 밀착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김재현·장주연·이효정, 2011). 2014년과 2015년의 일곡인권마을사업이라든가 세월호 관련 연대활동, 후쿠시마 3주기 문화제, 2016년의 일곡마을품앗이학교, 일곡마을총회, 일곡한마음축제, 문산마을공동체, 용봉동행복장터, 2017년의 일곡마을교육공동체 MOU, 일곡·문흥마을 촛불모임,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살레시오고등학교 3학년 GMO영화상영, 2018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동, 일곡·양산·문흥·삼각·운암동 마을축제, 광주여성영화제 참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빛고을생협의 새로운 정체성을 ‘치유와 힐링’으로 정하고 각종 지역단체와의 연계활동 및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고, 식품안전표시제(GMO) 캠페인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 ‘치유와 힐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빗고을생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본의 여러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생협’처럼 지역 주민의 노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활동가집단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빗고을생협은 전문화와 분업화의 영향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자성을 하고 있다. 활동가의 수도 초기의 10명 이하에서 2018년 말 현재 156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2017년에 활동가의 수가 2016년 70명 선에서 150명 넘는 인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빗고을생협의 활동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조직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법인설립에 따라 전담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는 마을모임이 동아리모임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데 비해 최근으로 오면서 마을모임과 동아리모임이 엇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을의 지연적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짬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동아리모임의 경우에는 개인적 선호에 따른 취미활동 등을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나 강제력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더불어사건

생협과 거래하는 1차 농축수산물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생산자들 사이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생협연대(중앙연합회 조직)는 조합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공개하고 사과

하는 원칙을 지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역생협의 경우에는 내부 활동가들의 해당 사건과의 관련 정도나 책임의 정도 및 관련자들과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그 여진이 남아 조직력을 약화시키거나 내부 분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기도 한다. 빗고을생협의 경우에 이러한 성격을 띤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 2004년 6월에 발생한 더불어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빗고을생협과 함께 수원생협 등이 내홍을 겪었고, 대구지역의 한 지역생협은 없어지기까지 했다.

더불어사건의 짙막한 개요는 더불어식품에서 생협에 납품하는 우리밀 빵에 원산지가 다른 밀을 혼입하여 만들어서 공급했던 것이다. 또한 그 몇 개월 후에는 빵뿐만 아니라 라면에도 똑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빗고을생협의 대표자는 생협연대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퇴하면서 회장대행을 하고 있었다. 지역생협의 대표이자 생협연대의 대표대행을 겸직하고 있다 보니 사건처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활동가들 중 일부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자는 의견, 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유통체계나 물류순환구조를 만들자고 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더불어식품의 경우에는 처음 규정을 어긴 것이니 앞으로 고쳐가면서 개선하자는 온정주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생협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핵심 가치를 둘러싼 이상론과 현실론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더불어식품 쪽보다는 생협의 핵심 활동가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혀서 확산되고 증폭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에 더불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협연대의 사무총장과 실무자가 사직하였는데, 이들은 빗고을생협의 활동가들과 상당히 친밀한 인물들이

었다. 이들은 빚고을생협 활동가들에게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빚고을생협에서는 더불어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사태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협연대에서는 한참 정리되고 있는 사건을 빚고을생협이 다시 들춰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빚고을생협의 일부 활동가들은 충분한 정보가 없이 일방의 의견만을 주로 들은 상태에서 ‘더불어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빚고을생협이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빚고을생협의 활동가들 중 일부가 전국총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를 무마하여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빚고을생협의 대표이자 생협연대의 대표대행을 맡고 있던 인물이 두 직책 모두를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빚고을생협의 이사 10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9명이 사퇴하였고, 다음 해인 2005년 2월 3일에는 생협연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고 상조회의 불신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빚고을생협이 생협연대의 회원자격을 2년간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겪으면서 광주 지역사회에서 빚고을생협의 내부 분열과 반목에 대해 좋지 않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핵심조합원인 조합비조합원의 수가 2003년 552명에서 2004년 28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물론 이 수치에는 2004년 분화된 두 곳의 생협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빠져나간 수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50% 가까이 줄어든 것은 빚고을생협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빚고을생협의 입장에서 볼 때 200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2003년부터 준비해 오던 지역생협의 분화정책에 따라 2004년 2월에 서구생협이, 같은 해 11월에 광산구생협이 별도의 지역생협으로 독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모태 생협인 빚고을생협이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조직력을 채 갖추지 못한 두 지역생협도 출범부터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

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교육학부모회의 활동가 몇 사람이 신입 이사로 들어오고 더불어사건으로 사퇴한 대표가 다시 이사로 들어와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경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동안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빚고을생협의 약 20년간의 역사에서 이 시기만큼 침체기를 맞이한 적이 없다고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2007년에 자연드림 일곡점을 광주의 제1호점으로 개장하여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더불어사건은 활동가집단 내부의 알력을 드러내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생협의 핵심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킨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협의 정체성, 빚고을생협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과 활동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론의 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빚고을생협의 매장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

빚고을생협의 매장사업은 200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9월 자연드림 일곡점을 개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장사업을 시작하면서 빚고을생협의 명칭도 ‘아이쿱빚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고 2009년 3월에는 조합 가입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조합비를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할인(CMS할인 3,000원, 인터넷주문 할인 2,000원을 빼면 실가입비는 15,000원)하였다. 이후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고 경영이 안정되면서 현재는 조합비가 10,000원으로 줄어들었다. 매장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장사업설명회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작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년에는 광우병 사태와 멜라닌 사건이 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

작한 것도 매장사업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결과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원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총 조합원수가 2007년 676명에서 2008년 1,983명으로, 조합비조합원수도 492명에서 1,152명이 되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였고 매장을 담당하는 직원도 10명을 채용하는 등 경영규모와 사업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도 2008년의 여세를 몰아 봉선점과 운암점 등 2개 매장을 새로 개장하였다. 이러한 확장 추세로 마을모임과 자연드림 모니터링의 주축 조합원들도 구성된 마을지기의 수가 2008년 8명에서 12명으로, 매장 직원의 수도 10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마을모임은 8개에서 14개로, 동아리모임은 1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조합원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라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거래를 이어주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좀 더 익명성에 기초하면서 다중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데 매장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또한 취급 품목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할인을 해주는 정책도 조합원을 확대시키는데 상당히 주효했다.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이나 생협 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도 차등화된 가격 정책을 펼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자연드림 1호점을 일곡동에 개설한 이유는 일곡동에만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밀집도와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마을모임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어서 마을모임을 주도하는 마을지기들의 빗고을생협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편이었고 마을지기들 중에서 활동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좋은 조건 하에서 일곡점은 경제적 수익도 착실하게 거두면서 조합원의 수를 늘리는데 효자 노릇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 위에서 광주의 각 지역생협에서는 순차적으로 직영매장

을 1곳씩 개장하였고 그 후 봉선점과 운암점 등 2곳의 조합협력점(프랜차이즈계약을 한 개인점)을 포함하여 총 14곳의 매장이 있고, 이를 전담하는 사무조직으로 권역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빗고을생협의 입장에서 보면 매장 개장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가구)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이점을 가져다준다. 매장이 한 곳 개장하면 한두 달 사이에 조합원 수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늘고 아무리 늘지 않는 지역도 석 달 내에 500명 정도가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한다. 대략 한 매장당 1천 명 정도의 조합원이 이용을 하는데, 이 조합원들 전부가 조합비는 물론이고 구매수수금을 지불하는 양질의 이용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경기가 나빠진 2015년, 2016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호조건 하에서 경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 지역사회에는 비교적 매장 경영을 순조롭게 이어나가는 빗고을생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너무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애초의 건강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향후 수익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될 텐데 기존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초록마을이나 풀무원과 다른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등으로 표현되는 시각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표면화된 대표적인 사건이 2014년 풍암점을 개장하면서 있었던 한살림공동체와 생협 사이의 마찰이었다. 생협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한살림공동체는 생협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생산부터 공급까지의 전 영역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생산자와 가공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연대를 중시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풍암점 개장을 계기로 한살림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매장인 '한살림' 근처에 계속 생협의 '자연드림' 매장이 들어서는데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즉 한살림 매장 인근에 생협의 자연드

림 매장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같은 식구들끼리 싸우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생협 입장에서는 신설될 매장 자리를 알아볼 때 임대료라든가 권리금 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살림’ 매장 근처에 개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나름의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지역사회 내에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한살림공동체는 광주지역 생협의 모태였고, 빛고을생협이 지역운동 출신의 여성 특히 주부들이 주축인데 비해 한살림공동체에는 남성들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고, 유학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살림공동체는 애초 도농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에 토대를 둔 건강한 사회 건설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세운 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기본 가치에 좀 더 충실하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매장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생협을 보면서 일종의 피해의식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살림공동체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생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미약하고 광주만 해도 생협의 활동영역이나 규모가 한살림공동체에 비해 훨씬 크고 활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협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한살림은 좀 더 시민사회운동에 가까운 고상한 느낌이 드는 반면 생협은 언젠가부터 장사치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대비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일견 생협에 대해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살림공동체보다 현실 상황을 좀 더 잘 헤쳐 나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깔려 있다. 이는 한살림공동체와 생협의 활동영역이 이미 겹치지 않으며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보는 생협 활동가들의 시각 속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한살림공동체와는 달리, 생협은 생산부터 유통부문을까지 생협 내의 별도의 전문조직이 담당하

고 매장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상품판매와 교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살림공동체보다는 지역사회의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공감대 강화를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빛고을생협 활동가들은 현재 한살림공동체와 식생활개선네트워크활동만 함께 하고 있지만 두 단체가 비슷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빛고을생협이 한살림공동체보다는 한층 여유가 있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사회 내에서의 마찰은 일견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이홍택·정성훈 2012).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적응 전략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지향하고 있는 핵심 활동영역의 분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활동영역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든가 연대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두 단체 모두에게 긴요할 것으로 판단한다(주성재·노경란, 2018).

4. 맺음말

이 글은 한국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산하의 빛고을아이쿱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우선 전국의 지역생협의 연합체인 생협연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빛고을생협의 역사를 시기를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빛고을생협의 위상과 정체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더불어사건과 매장사업에 대한 지역시민사

회단체 사이의 알력과 갈등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빛고을생협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성격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경영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펼치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빛고을생협은 창립 준비기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창립 이후에도 생협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침체를 겪기도 하였으며 지역사회, 특히 시민사회운동 측으로부터도 일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고을생협은 꾸준히 조합원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생협의 고유한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매장사업이 한층 중요해지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만 한다는 점, 실무조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관료화의 경향이 엿보인다는 점, 전업주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든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빛고을생협이 2018년부터 ‘치유와 힐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연령별 필요와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빛고을생협이 지역사회와 밀착한 시민사회운동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걸맞은 활동영역과 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는 빛고을생협의 핵심 활동가들의 생애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활동가들 간에도 인생의 편력이나 참여 동기,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 주부와 활동가라는 이중적 역할의 양립 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차별성이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상에도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한다. 이를 밝혀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한계, 즉 지역사회를 변화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그 영향을 수용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Held and McGrew, 2007)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제네바에서 창설되었다 하여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리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다.
- 2) 빛고을생협은 2001년에 출범한 후, 총 5명의 대표자 또는 이사장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한마음공동체(하남한마을생활협동조합)에서 활동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빛고을생협의 뿌리가 한마음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초기에는 매장경영전문회사나 매장전문자회사, 매장공동사업법인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현재는 권역공동사업법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음.

참고문헌

-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구양미, 2015, “사회적경제와 지리, 공간, 지역,”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p.112-122.
- 김명혜, 1998, “공동체와 여성,” 현대사회과학연구 9, pp. 87-11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재현·장주연·이효정, 201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역사회투자활동과 중간지원조직의 역

할: 농촌사랑운동본부의 1사1촌 운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pp.211-224.

김종숙, 19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54.

박주희, 2009, 주부의 생협운동과 가치 지향—광주 지역
생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
학과 석사학위 논문.

빛고을아이쿱생협20년사발간위원회, 2019, “빛고을아이
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미발간 자
료집.

세이프넷(SAFENet), 2019, 2018년 세이프넷 공동연차보
고서, 서울: 아이쿱생협연합회.

이홍택·정성훈, 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발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사례로—,” 한
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708-720.

주성재·노경란, 2018,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경제지리학의
연구 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2), pp.173-
191.

현기순·이금숙, 2011, “한국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확산 양
상과 그 지리적 함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pp.377-393.

현기순·이금숙, 2013, “한국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변
화와 여성노동력의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pp.613-630.

홍성흡 외, 2016, 사회적경제와 지역혁신, 광주: 전남대학

교출판부.

Held, D. and McGrew, A. (eds.), 2007 *Globalization Theory:
Approaches and Controversies*, Cambridge: Polity
Press

(사)한국생협연대, 2002, 새로운 생협운동, 서울: (주)봄인
터랙티브미디어.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8, 협동하는 사람들
의 가치와 실천: 스무살 아이쿱, 서울:(재)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iCOOP생협연대, 2008,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
10년사, 서울: 도서출판 푸른나무.

교신: 홍성흡,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전화:
062-530-2695, 이메일: sibung@jnu.ac.kr

Correspondence: Sung Heup Hong, Department of Cul-
tural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Junnam Na-
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Kwangju, 61186,
Korea, Tel: 82-62-530-2695, E-mail: sibung@jnu.
ac.kr

최초투고일 2019년 11월 29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3일
최종접수일 2019년 12월 20일